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5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병무청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가. 병무청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홍소영 병무청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장님, 앉아서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예.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병무청·방위사업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8월 31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뒤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병무청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5분)

○소위원장 김병주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병무청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1번, 잠복결핵검사 낙찰단가를 고려한 단가 편성 필요합니다.

잠복결핵검사……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한꺼번에 다 하면 어려우니까 반 나눕시다. 1번에서 4번까지 하고 5번에서 9번까지 하는 걸로.

○전문위원 문성환 예, 알겠습니다.

연번 1번에서 4번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검사 위탁검사 편성단가와 실제 계약단가의 차이로 연례적으로 불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외부 위탁검사 관련 예산편성 시 최근의 실제 집행단가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 연번 2번,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별 구비장비 편차 해소 필요합니다.

현재 11개소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각 센터별로 체험형 장비의 종류나 장비 수의 편차가 커서 다양한 체험을 갖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체험형 구비장비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 확충,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페이지 연번 3번, 국외병역자원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병무관 파견 추진 필요합니다.

국외병역자원 관리사업을 단순한 안내나 홍보 차원을 넘어 병무관의 파견을 통해 적극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내실 있는 국외자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해 미국 및 일본에 대해서 병무관을 신설하여 파견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연번 4번, 사회복지무요원 교육 과정 효과성 제고 필요입니다.

사회복지무요원 교육 중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응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새롭과정의 교육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무요원 새롭과정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1안부터 4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1안은 주의, 2안과 3안은 그대로 수용하고 4안도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1안하고 4안 있잖아요. 1안 제도개선 대신 주의로 한 이유가 뭐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제도개선보다는 저희가 주의를 해서 예산편성 시에 실제 계약단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보다는 주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다음 4번은 왜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4번은 사회복지무요원의 복무지도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에 제도개선이 일부 필요하고 실제 제도개선을 위해서 복무 과정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제가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잠복결핵 낙찰단가 예산에 관한 건 작년도에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소위원장, 박선원 위원과 사회교대)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결핵검사에 계약하는 위탁검사 건당의 단가가 과거에는 한 곳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곳으로 늘어났네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의료법인 녹색자의료재단에서 22년에 할 때는 단가가 1만 5570원이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세 곳이 되다 보니까 편성단가는 1만 6000원 똑같은데 계약단가가 1만 1358원으로 4642원이 다운됐습니다.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22년에서 25년에 갑자기 430원 차이가 4600원으로 10배가 갑자기 차이 난 게 아니고 이미 23년도에 1500원, 24년도에 3600원으로 단가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이 편성단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사하는 백신의 부분에 이게 무슨 엄청나게 새로운 첨단 신약도 아니고 해서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26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26년도의 계약 편성단가는 전년도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26년

도부터는 결핵검사를 하는 검사 대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병역판정검사 모든 사람들에게 검사를 실시했는데 25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복무요원한테 결핵검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축소되어서 1인당 가격 단가가 인하되는 데 제한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26년에는 편성단가가 1만 6000원이 아니고 3만 3600원으로 증가했는데 집행단가는 오히려 2만 3520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약 1만 8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25년 결 결산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1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27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편성하고 계십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27년 예산안은 26년도 계약단가에 전년도 편성단가보다는 좀 떨어지고 계약단가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10%만 인상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대략 2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 정도로 편성하셨나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뒤에 계신,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병무청병역자원국장 정재숙 2만 5870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2만 5000……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불용률이 별로 차이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22년부터 지속적으로 된 건데 중간에 변동 없이 이렇게 온 거는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불용률이 27.2%에 달하는 이 정도는, 30%면 이 예산을 떼다 썼다면이라는 가정을 저는 합니다, 항상. 다른 곳에 썼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 주시고 앞으로도 그걸, 결산 내년에 하면서 올해 편성된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서 그거 가감을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지적사항을 안 한 거고.

3번 이게 ‘국외의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서 병무관을 신설하라’,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이거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병무관을 파견해서 하라는 제도개선이 아니고 제 제도개선의 의미는 해외 체류 중인 이 국외 병역 관리,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되 이걸 상설로 병무관을 신설해서 파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인원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인원들이 미국하고 일본 아녜니까, 64.3%. 그러니까 이 인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라는 제도개선이지, 병무관을 이거 다른 거 관심 없고 병무관 하나 신설해서 파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장님.

○병무청장 홍소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복무요원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도요 이거 사회복지복무요원은 애초에 편성될 때 여러 가지로 현역이라든지 편성이 되지 않을 인원으로 자원했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는 제가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규정위반 그다음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인원이 40% 전후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지금과 같은 책임의식, 사명감 고취 이런 성격에 대한 교육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병무청이 오롯이 다 교육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들어오면 이 병역자원은 병무청 소관의 관리 자원이니까 청장님이 국민의 시민의식교육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관심 가

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35%는 교육 없이 방치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 이수하지 않은 35%. 이 인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꼼꼼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예.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박선원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강선영 위원님이 꼼꼼하게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입영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인력에 대한 복무요원에 대한 배치, 이분들이 대기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많은 민원들이 폭증을 합니다. 요즘에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사회복무요원 대비 복무 기간 수가 좀 적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은 대기 기간이 길게는 2년 이상 걸리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2년 6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 1년 미만으로 오히려 자원이 부족해서 지방에 따라서 소집대기 기간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보통 보면 다 청년들인데 본인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장기간 계속 2년,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는 2년 내외의 기간, 지방은 1년 정도, 너무 굉장히 많은 대기 기간이 있어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아주 불합리한, 이거 반드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무청장 홍소영 그래서 저희 병무청도 수요 기관 창출을 위해서, 소요 창출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김병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현역병 인건비 인상분과 똑같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자체나 복무 기간에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거야 뭐…… 그것은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지금 부담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그건 당연히 부담을 해야지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들은 지엽적인 부분일 테고 중요한 것은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길지 않도록, 예를 들면 한 6개월 이내라든가 이렇게 예측가능한 이런 정도의 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선진 병무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장님께서 수요처 발굴, 당연히 그러면 앞서서 해야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데 수요처 발굴이 안 돼서 결국은 장기화되는 거 아닙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아니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2년을 6개월로 어떻게 단축할 거예요? 젊은 청년들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들 준비를 미리미리 예측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국가적인 책임이예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을 하는 거

리 시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고민만 해서 안 되고. 아무튼 6개월 이내로 선진 병무행정,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대기가 되지 않도록 한번 안을 만들어서 지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사업은 주의 수용, 2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3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4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위원장님, 지금 연번 3번의 경우 강선영 위원님께서 병무관 파견 내용을 약간 수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예,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문성환**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걸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5번에서 9번 사업까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문성환**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연번 5번 병역의무자 여비 대상자 인원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입니다.

판정검사, 입영 등의 여비 지원 예산에서 불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집행 인원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페이지 연번 6번,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입니다.

최근 전자송달 이용이 증가하고 등기우편 송달은 줄어들면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사업에서 20%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열람의 대상자가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청년인 점을 고려해 각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7페이지 연번 7번, 사회복지준비금 월 지원단가 추계 개선을 통한 불용 최소화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월 납입금액의 부정확한 추계로 과다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사회복지준비금 사업의 과다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월 지원단가 등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납입금액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적절해 보입니다.

8페이지 연번 8번, 사회복지무요원운용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

고 필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운용 사업에서 매년 불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운용 사업의 예산편성 정확도를 제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연번 9번,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 추진업체 다양화 필요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서 서울청 등 7개 청은 매년 동일한 안전점검 용역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향후 안전점검 용역업체 선정 시 가격경쟁력, 안전점검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용역업체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연번 5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전문위원의 요구 전체를 다 수용합니다. 다만 7번은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주의를 수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회복귀준비금의 적금 가입 금액과 집행 실적 등 분석을 통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높이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적금 가입의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적금 가입률과 납입률을 증대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병무청장님, 병역의무자 여비 대상자 인원 추계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매년 한 10억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병무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병역법에 의거해서 여비는 꼭 필수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권익 침해, 신뢰 저하의 여지가 있어서 일정 수준의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추정이지요. 추정인데 병역 자원이 100만 명, 90만 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해마다 그게 10억씩 차이가 난다는 건, 추정해서 그 추정의 비율을 10%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예산이라는 게 매우 고정돼서 단위 사업 간에 이동도 어렵고 이·전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10% 이상, 10억 이상씩 과다 편성을……

병무청의 답변을 보면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까라는 의견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병무청장 홍소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24년도 6월부터 입영판정 신체검사, 입영 신체검사가 저희 병무청으로 전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선영 위원 23·24년도에는 6만 명 차이였는데 25년도에 갑자기 11만 명, 그러면 러프하게 봐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산정에. 그래서 이 부분은 병무청의 관련한 모든 분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과거의 자료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6번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일반회계로 국방부를 대상으로 이걸 했는데요. 이게 과거에 우편으로 하던 걸 전자송달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예산은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는 그래서 앞으로 줄여 가겠다는 태도인데 병무청은 관련한 분들한테 질의를 넣으면 ‘매년 전자송달 비율은 더 감소하고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중임’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병무청에 계신 분들의 태도는.

저 개인이 병무청에 계신 특정한 개인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제게 맡겨진 국민이 저한테 부여한 사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매우 불만입니다.

병무청장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국방부도 했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게 혹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 아닌데 병무청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질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겠으나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 감독에 대해서 불만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위원님, 이 부분은 27년 예산안은 전자송달 증가율을 반영해서 26년 예산 대비 7억 9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7번 사회복귀준비금 이것은 병무청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이 하고 장병내일적금은 국방부가 나머지 하는데 이것은 병사들이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어쩔 수 없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여하히 이 인원들에 대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금을 많이 부었는데 지원금이 없어서 못 지원하면 그것도 차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금액을,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하면 얼마의 이윤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나 본인들이, 청년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선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사회복귀준비금을 22년부터 24년까지는 저희가 월 4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25년부터는 55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돼서 이것을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가입 홍보를 위해서 군사교육 소집에, 군사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가입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높여서 편성된 예산이 적정히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9번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 추진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위탁한 연도별 용역업체, 경인청, 광주·전남청, 강원영동, 대전·충남청 제외하고—이것 잘하고 있는 부서입니다—서울청, 부산·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기북부청은

4년 동안 시설점검의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고 가격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일한 업체에 계속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겠지만 그 업체의 인원과 그 청에 있는 인원 간에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제가 지휘관 할 때도 보면 용역업체를 바꾸려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혹여라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동일한 업체를 반복하다 보면 또 다른 업체의 장점을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한 잘하고 있는 경인청, 광주·전남청, 강원영동청, 대전·충남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청에 대해서는 한번 업체를 바꿔 보라, 그래서 시설점검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 용역업체도 다양화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저도 간단하게……

○소위원장 김병주 박선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선원 위원 청장님, 여기 강선영 위원님 계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게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애정을 갖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살이 살펴봐 주시는 위원님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 병무청의 복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건 잘못됐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원 위원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청장님이 업무 파악도 훨씬 더 잘하시고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9건이니까 많은 건 아니예요. 그래서 병무행정을 잘하고 계신다는 신뢰와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살펴 주시고요.

강선영 위원님이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동의한다 그러셨어요. 그건 아니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지적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회복지무요원들의 사회복지준비금을 아예 시작부터 홍보를 많이 하겠다 하는 것하고, 요새 젊은이들이 당연히 재산 형성에 관심이 많지요. 그러니까 잘 홍보해서 늘리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사실 9페이지 이것은 매우 점잖게 강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게 하면 이것은 시정 내지는 감사해야 된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7개 청에서 매년 동일한 안전점검 용역업체를 써요? 형식적으로라도 공고를 통해서 공모 절차를 밟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금지사항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어떤 용역을 줄 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객관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능력이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능력이 있어서 계속 점수가 잘 나와서 그 업체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제도개선사항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를 달든 부대의견을 달든 해서 시정으로 하나 올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변경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박선원 위원 7개 업체가 반복적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부정의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반드시 이런 데는 부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으로 하고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감사를 하시더라도 이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병주 예, 말씀해 주세요.

○柳榮夏 위원 청장님, 8번.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니까 결국 사회복지무원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柳榮夏 위원 지금 예측은 그런 겁니다. 병력 자원이 부족하면 사회복지무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예측이 가능하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이게 불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저희가 감소되는 추이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번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柳榮夏 위원 예,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8번 사항은 병무청 내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柳榮夏 위원 사실 이게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만 세심하게 하면 이 정도 불용액은 잡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소위원장 김병주 박선원 위원께서 9번 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시정으로 해 달라

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 문제 제기한 위원이 강선영 위원님이신데 강선영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선영 위원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최고위원님이시니까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제가 봐도 시정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도는 이미 돼 있고, 계약하는 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5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6번 사업은 주의 수용, 7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8번 과제는 제도개선 수용, 9번 과제는 시정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을 적극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해서.

○박선원 위원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산소위가 어느 때보다도 여야 합의가 잘 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위원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 조치요구 사항 등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요구 사항 등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병무청장 인사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방산청장이 참석하여야 합니다만 공무 국외 출장 일정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대신 방위사업청 차장이 회의에 참석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적기 추진과 방산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서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업에서 3번 사업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내용은 총 32건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6건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효율성 있는 진행을 위해서 관련 내용은 묶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휘정찰 사업은 총 9건인데 우선 1번부터 3번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성능개량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5년 1분기에 사업공고를 하고 3분기에 체계개발 계약을 위하여 일반연구비 10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에서는 12월 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5개월가량 지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말 국고자금의 일시 부족으로 관련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국고자금 일시 부족은 방위사업청은 836억 원이고요 어제 국방부는 논의를 했었는데 5002억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27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설 여건 등 사업 장애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위의 내용이 방위사업청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적정해 보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무인수색차량 양산과 연계된 패키지시설 사업의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2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양산 사업에 패키지시설 사업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자체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협상 대상 업체의 신원 조사 지원 등으로 해당 연구비를 2026년도에 다시 이월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차량 정비·보관을 설치하는 패키지시설 사업은 체계 개발 단계에서 그 필요성과 규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여 연구용역부터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추진 절차나 예산편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양산사업의 패키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기본 전략 또는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시설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신규 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5년도에 차량형 무전기 설치 지연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차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양산계약 기간도 25년에서 26년으로 연장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예처와 총사업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물량·단가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양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소요군과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설치 대상 차종 및 전력화 일정을 확정하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번 안건, 연합지휘통제체계는 신규 사업을 사전체계개발기본 계획이 수립되도록 계획하고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최소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2번 안건도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거 수용하겠습니다. 3번 안건도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1번 AKJCCS 성능개량 사업이요.

차장님, 이 사업은 25년도 예산을 사업 착수가 안 돼서 불용 처리하고 26년도 다른 사업에 예산을 전용해서 계약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운용에 비효율이 발생한 거 동의

하지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이게 애초에 25년 7월에 사업공고를 하고 12월에 계약을 하는 등 5개월 정도 지연됐는데 방위사업청에서 설명하기로는 서버 설치 공간 그리고 전력 공급 부족 등 문제와 미국 측의 체계 운용 기능 변경에 대한 대응으로 지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사청이 가장 중요한 건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사업 관리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문으로 이것만 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걸 예측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었다.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사업 관리하는, 각 기능별로 이거에 대한 PM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그들이 그걸 자기가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 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2번 사업은 제가 지적 안 했고.

3번 사업이 제일 문제인데 TICN Block I, 어제 저희가 국회 일반회계 하면서 국방부의 감사관실에서 25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감찰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5년도 감찰 결과니까 24년 사업이지요. 24년에 주요 기관 교육을 위한 총사업비 3.86억이었는데 204.9억, 그러니까 대략 한 200억 정도를 예산안이 이·전용되었다. 예산이 과도하다라고 해서 여야 구분 없이 이종배·임종득·조정훈·최기상 위원이 과도한 이·전용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20에서 27년 사업인데 16년에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이었는데 25년 사타했더니 총사업비가 2조 200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1조가 증액됐습니다.

200억 원이 늘었다고 국방부에서 정책감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국회에서의 의견에 따라서 감사 조치하겠다는데 2조가 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 I 사업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위원님……

○강선영 위원 국방부 정책감사를 요구합니다.

○박선원 위원 저도……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박선원 위원님 일단 말씀해 주세요.

○박선원 위원 방사청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1번 사업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성능 개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박선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이건 한미연합작전을 할 때 미 측의 지휘통제체계와 연동되

는 거기 때문에 한미연합작전의 기반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한미연합체계의 뇌와 신경 조직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능 개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1억을 불용해 가지고 이 사업이 못 가면 어떤 정도의 문제가 생기나요? 액수는 항상 방위력 개선 사업 이런 것 할 때 몇조, 몇조, 몇천억, 5년 중기계획 하나까 그런 숫자에 익숙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 개량의 101억을, 대부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 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업이 못 가면? 그냥 올해 해도 되고 안 되면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런 것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진행하는 성능 개량 사업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101억이라고 하는 금액 대비 실제로 훨씬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방사청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위사업청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 때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좀 늦은 점이 있지만 빠르게 진행해서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뇌에 혈전이 있으면 그것 하나 제거하는 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내버려두면, 2년 3년 늦어지면 뇌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수술비는 얼마 안 들지라도. 저는 그런 문제로 본다 이거예요. 101억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시정·제도개선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제도개선으로 오늘 결정을 해. 그러면 방사청에서는 이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똑바로 해야지 제도가 문제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 제도개선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선영 위원이 주의가 아니라 정책감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게 1조 2000억 사업이면 육군 주요 차량의 거의 대부분 아니예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전방의 작전에 투입될 차량의 거의 대부분의 무전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당 규모 예산이 이월·불용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데 차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주의 정도로 끝날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작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작전하는 입장에서. ‘물건 대 주다가 조금 모자라서 미안하게 됐으니까 주의 한 번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작전을.....

여러분들 맨날 이야기하는 게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KJCCS도 아니고 AKJCCS의 성능 개량이 안 되고전술정보통신체계에서 현장, 전투 작전에서 쓰는 무전기 설치가 지연이 돼 가지고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1번·3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책감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방위사업청장님,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번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24년 9월에 했었는데 이때 조건부 타당이 나왔었고 방위사업청이 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느라고 한 3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5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1월부터 바로 개발에 착

수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29년 전력화는 이상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계약이 됐고 추진되기 때문에 시정하기는 어렵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소위원장 김병주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게 시정하되 이 사업에 대한 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봤을 때 제도개선을 수용하되 박선원 위원의 의견을 달아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한다’ 그렇게 좀 달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다음에 3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3번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1조 2000억 정도 TMMR 단말기 예산을 잡았었는데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 단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2조 이상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향은 현재 1조 20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처랑 협의해서 사업타당성조사 등 꼼꼼히 따져 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주의를 주시면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TICN Block I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Block은 TICN 체계의 Block I -②이기 때문에 TMMR 무선 단말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최초에는 전체가 1조 2000억 원이었는데, 지금 2조까지 늘어난데 1조 2000억 범위 내에서 한다면 반밖에 확보가 안 되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지금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가 물량의 확보가 타당한지를 따져 보고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런데 시대의 변화 속도가 빨라서 예측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배나 차이 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이게 처음에 개발을 2010년대부터 한 거고 오래전에 양산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간의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증액 수요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최초에 산정한 1조 2000억 산정은 몇 년도에 한 거야?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조 2000억 산정을 2010년, 11년 정도에 저희들이……

○소위원장 김병주 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산정한 거고?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2조 얼마 든다는 건 언제 산정한 거야?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이것은 25년도에 새롭게 산정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15년 갭이 있는 거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조금 전에 강선영 위원님 말씀할 때는 한 1~2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했었나 했는데 15년 갭이 생긴 거네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잠시 보류를 할 테니까 이따 점심시간에 강선영 위원님한테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다시 드리고 오후에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요?

○강선영 위원 이 TMMR이라는 게 결국 전술차량에 설치하는 무전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최초의 TMMR 성능을 평가할 때, 그때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20~27년 사업 아니었나요? 사업이 언제였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이게 개발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됐었고 최초 양산이 2020년, 22년 해 가지고 지금 양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기술의 진보화를 봤을 때…… 지금 그 당시에 개발된 것을 물가가 올라 가지고 단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진보한 기술로 만들 무전기가, 지금 AI가 발달하고 5G, 6G 이런 시대에 그때 만든 기술의 수준이 과연 그렇게 오른 단가를 낮춰 줘야 될 정도의 기술인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 기재부와 합의도 안 하고 승인도 받지 않고 2023년에 후속 양산 1차 계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재부와 협의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아, 협의는 했네요. 승인은 안 받고 23년 12월에 후속 양산 1차 계약 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방사청은. ‘어쩌라고? 가진 가야 되니까 일단 계약하고 돈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한국형 경헬기 LAH 그다음에 수리온 헬기 최초의 양산 대수를 결정할 때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했는데 계속 개발하는 KAI가 기술이 뭐 어떻고 단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뭐를 감소시키냐? 이와 똑같습니다. 3만 대를 1만 8000대로 줄인다고 하는 것처럼 단가를 올려 주면서 애초에 전력화 210대가 174대로 줄었습니다, LAH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210대를 판단할 때 한반도 전장에서 서측은 개활지기 때문에 공격헬기 12대에 기동헬기 18대, 동측은 기동헬기 오히려 증가시키고 공격헬기 줄이고…… 서로 바뀌었습니다. 서측은 공격헬기 위주로, 동측은 기동헬기 위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단가가 늘었다고 해서 사업비를 늘리면서 대수를 줄였습니다. 애초에 처음 평가할 때는 한반도 전장과 적의 싸우는 개념, 우리의 방어 능력을 가지고 평가한 무기체계 대수가 예산 때문에 막 줄어요. 이것 똑같다는 겁니다.

2016년에 물량 3만 대로 평가할 때의 한반도 전장과 2024년에 1만 8000대로 줄었을 때 이 전장에 오히려 사단은 여단급으로 편성되면서 경량화·기동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경량화·기동화되면 분명히 차량 대수 늘어날 텐데 어떻게 TMMR 대수가 줄어들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판단할 때부터 사업에 이를 때까지 국회 예결위에서 소형자폭드론 200억 증가한 걸로 정책감사하듯이 1조 더 증가했으니까 정책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그냥 ‘시대가 변했고 예산이 늘었

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방사청이 효율성·투명성인데……

엣그제 LIG넥스원하고 문제 돼서 LIG D&A 지금 구속됐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지요? 사업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업체에 비용 올려 주고 짬짜미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 구속됐지 않습니까, 방사청? 애초에 조달청에서 방위사업 무기체계 획득비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방사청, 맨 처음에 뭘니까?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가장 중요한 방사청의 목적인데 그것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정책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압니까? TMMR 양산하는 데 가격이 이렇게 단가가 올라간 것, 사업비 증가한 것, 어떤 공무원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200억 원 증가한 소형자폭드론처럼 방사청 이 사업도 정책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오늘 이따 2시 반에 또 의결정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의 효율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저는 강선영 위원님의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면으로 결론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점심시간에 강선영 위원님과 박선원 위원님께 세부적인 사업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오후에 결론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오늘 진도를 못 가니까요.

○강선영 위원 예, 다음 진행하십시오.

○소위원장 김병주 그것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빠르게……

○박선원 위원 정책감사에 입장을 같이한다는 건 정리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박선원 위원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결론은 오후에 내리겠다는 그겁니다.

○박선원 위원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1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2번은 주의 수용이고요. 3번은 오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5번·6번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지휘정찰 분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부터 6번입니다.

4번 사업은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 중 패키지시설사업의 집행 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패키지시설사업은 당초에는 24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어 총사업비 분석·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설계 일정이 지연되어 패키지시설사업 예산 163억 원 중 공사비 등 113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패키지시설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번 사항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의 전력화 지연 문제입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4854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경계시스템을 육군 및 해병대에 전력화하는 사업입니다.

25년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3개 제안업체 모두 결함이 확인되어 해당 구매시험평가는 중단되었으며 이후 재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를 거쳐 올해 6월부터 2개 업체에 대하여 재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초 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전력화가 28년으로 지연되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재구매시험평가 및 후속 계약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관련 예산의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용원 위원님께서 하나의 내용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구매평가 과정에서 기상이 좋지 않았을 때의 평가를 배제하는 부분 또한 월 북 보조도구를 활용한 침투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GOP과학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실전성 결여와 보안인증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의 낙찰차액을 예산안에 적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12월 주장비 계약체결 과정에서 195억 원 수준의 대규모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총사업비와 연도별 계약금액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낙찰차액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24년도 낙찰차액 잔액 97억 5600만 원과 25년도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1억 3500만 원이 각각 불용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계약 과정에서 대규모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총사업비와 예산안에 적기에 반영하여 사업·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4번 안건 군위성통신체계 양산 사업 시정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5번 안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주의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6번 안건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주의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관련해서 방사청이 이 예산 하기 전에 문제가 됐다고 저희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게 지금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사업하고 뒤에 나온 다목적전술차량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2개 다 뭐가 문제냐면 사업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차장님?

이게 뭐냐 하면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성능개량을 하기 위해서 시험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유용원 위원님이 여기 참석 안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어느 회사가 하는 건지 언론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방사청 사업의 특징은 제가 보니까 잘 모르지만 선정된 업체가 있으면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계속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노이즈를 만듭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똑바로 진행하고 다 철차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도 걸고 언론플레이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 사업을 관리하는 분들이 착수 단계부터 정확하게 구매평가 부분에 대한 요소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경쟁입찰 단계에서 정확하게 이 항목을 가지고 반영시키겠다, 절차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사업관리하는 방사청에서 미흡하면 고소도 당하고 그다음에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뒤엣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 부분도 지금 장관께서는 4월 7일 날 GOP 전방부대 AI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하겠다, 경계병력을 600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4월 7일 날 경계병력을 줄이겠다고 말은 했는데 사업은 지금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플레이할 수 있지만 저는 방사청의 어려움, 국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언론플레이 같은 것 안 하세요.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장관이 지적해서가 아니고 병력이 감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하는 게 사람으로, 24시간 눈 뜨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잘 경계할 수 있다라는 과학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추경예산에서 예산 감축돼 가지고 3억 5800만 원 축소되고 이런 일을 거치면…… 3억 원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을 축소하고 이렇게 진행하냐.

사업관리에 대한 관심을 길게 말했지만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사업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현재 이 사업은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매시험평가 중에 있고 올해 연말에 계약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천 위원님.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차장님,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약 관리 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유용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침투상황을 잡아낼 수 있는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성능의 문제 또 이런저런 약간 잡아내기 어려운 것들을 뻔 것 아니냐, 이 평가 요소에서. 이런 게 실제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잡아 놓은 평가 장소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제대로 시험하는데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구매시험평가가 예를 들면 악기상이랄지 여러 가지 산악 지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대로 평가하는 데 적절한 지역에서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일단 평가 항목 관련해서 악기상의 평가가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제안서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시험평가 기준에 포함이 돼서 정확히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소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GOP 유사 지역, 9사단 지역에서만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GOP 지역 15사단을 포함해서 실제로 배치될 부대에서도 같이 여기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유용원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어떤 평가 항목이나 평가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다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한번 판단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하면 현장시찰 일정도 있을 텐데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나 많은 관심이 있고 방금 강선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은 불가피할 부분인데.

지금 이게 결국은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문제가 없어야 우리 전방경계에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셔서 구매시험평가를 저희가 직접 가서 어떤 형태로, 과연 제대로 어떤 침투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직접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추가로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병주 천하람 위원님 현장 위주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요.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실제 많은 효율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든가 이런 게 장착이 됐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동물이나 적을 식별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시키되 최대한 빨리 이것을 해야만 병력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세요.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업은 시정 수용, 5번 사업은 주의 수용, 6번 사업은 주의 수용입니다.

7번 사업에서부터 9번 사업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계속해서 지휘정찰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부터 9번입니다.

7번 사업은 소총사격무인항공기 구매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소총사격무인항공기 구매를 위한 최초 공고 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습시다만 그중 1개 업체가 제안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유찰되었고 25년 8월 재공고를 실시하여 26년 5월 말 현재 구매시험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장비 계약이 계속 순연되어 당초 사업 종료 기한인 27년까지 납품 및 전력화 완료가 어렵게 되어 사업기간이 28년으로 연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업체의 사업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일정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10페이지, 8번입니다.

다목적무인차량 관련 성능 확인 관련된 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다목적무인차량 기종결정 및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성능 확인 절차 중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제출 당시 최대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5년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성능 확인을 위한 선결 조건에 해당하는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두 업체가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업 추진이 추가로 지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성능 확인 관련된 절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를 제시하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번 중거리자폭드론 전력화 지연 문제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5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7년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에서 소요군과의 협의가 장기화되어 입찰공고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이후에도 유찰 및 재공고가 반복됨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 9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착수 전 소요군 및 참여 예상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반복적인 유찰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를 제시하셨습니다만 동 사업은 유찰 등 업체의 귀책사유도 있긴 합니다만 협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었고 전력화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좀 더 적정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7번 안전 소총사격무인항공기와 관련해서는 시정 요구 수용

하겠습니다.

8번 다목적무인차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26년 7월 기종 결정하였고 8월에 계약 체결 예정인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안전 중거리자폭드론 관련해서는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병주 예.

○박선원 위원 지금 방사청에서도 물론이고 과거 획득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ROC를 최대한 높여요, 처음 사업 갈 때. ROC를 최대한 높여. 그래 가지고 이 정도의 고품격 사양이니까 꼭 필요하다, 안 살 수 없게 만들어. 그런데 ROC를 최대한 높여 났으니까 사업은 항상 지연이 돼요. 그래서 마치 건설회사에서 설계변경 하듯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한 번 더 튀겨요. 왜? 매몰비용이 있으니까 안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동안 투입한 게 20%, 30%,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튀겨. 그다음에 뭘로 나오느냐? 기간 연장으로 나와요. 항상 그렇지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방사청 만든 거거든요.

다시 정리합시다. ROC 터무니없이 높여 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안 살래요?’ 해서 사게 만들어. 계약하게 만들어. 중기계획에 태워. 그래서 목을 만들어요. 처음에 1%, 2%밖에 아니니까 ‘예산 부담 없습니다’ 해서 태워요. 태우게 만들어.

그다음에 ROC 되느냐 보면 체계 개발할 단계에 들어가면 ROC 충족을 못 시켜요. ROC 충족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돈 더 쥐야 되고 사업은 더 지연돼요. 나중에 아까 그 과학화 경계처럼 평가항목을 낮춰요. 그래서 원래 사기로 한 물건보다 훨씬 안 좋은 물건을 훨씬 장기간에 걸쳐서 훨씬 비싸게 사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게 전 사업 부서에 다 만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른 데서 그 사업 했으니까, 저 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해. 뭐예요, 이게.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고 특히 이제 소요 결정 단계에서 통합 소요 기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연구기관이나 군이 다 참여해서 기술적인 도달 가능성 또 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봐서 수준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도 사업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획득 계획이 현실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짚고 그래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ROC를 낮추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낮추지 않으면 평가항목을 조정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시간하고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점이 있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보세요. 다 계시잖아요. 최하 15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 2006년에 방사청 만들어 가지고 지금 20년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됐으니까 룬텀으로 장기 재검토 과정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자체적으

로, 전체 중요 사업 한 20개 켜 째아 놓고 육해공 해 가지고 전력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라니까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옛날보다 주먹구구가 아니라고. 그러나 그것은 방사청 내부의 자체평가이고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우리가 ROC를 얼마나 제때 충족시켰는지, 그 가격대로 했는지, 제대로 납기를 지켰는지, 그 관리는 왜 안 됐는지.

차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된 사례가 그래도 한 8, 90% 이상 되고 조금 늦춰지거나 돈 늘어난 것들이 한 10%, 20% 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새로 청장도 오셨고 차장도 새로 되셨잖아요. 한번 보시라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차장님, ROC 결정을 어디서 하지요? 합참에서 하나요, 방사청에서 하나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합참에서 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합참이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소요 군에서 ROC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

○강선영 위원 저 짧게 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무인차량 지연된 게 성능확인 시험평가 절차·기준 문제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게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사업 관리를 좀 꼼꼼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 관리하시는 분도 거기 근무하는 경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하이어라키(hierarchy)가 있어 가지고 위에 상급자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경험상 못할 수도 있는데 조직 구조상 위에 계신 분들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처음 해 보는 분들이 계시거나 사업 관리에 좀 미진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꼼꼼히 해서 이렇게 별거 아닌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박선원 위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듣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참에 있을 때 ROC를 많이 군에서 제기해 봤을 때 군 소요분은 늘 높은 수준의 사양을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술 수준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업이 가고도 업체들이 못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사실 ROC를 조정하게 되면 대개 사업담당자는 위험률이 높아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주의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늦게 가고 지연되고 또 예산이 엉키게 되

는 면이 있으니까, ROC가 합참에서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잖아요, 기술적인 수준.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것을 적정 기술 수준으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뭘 말인지 알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런 취지들을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7번 사업은 시정 수용, 8번 사업은 주의 수용, 9번 사업은 시정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0번부터 12번 사업까지 수석전문위원 발표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화력 분야는 5건입니다.

먼저 10번부터 12번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사업은 155mm 정밀유도포탄 사업의 장기 지연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적의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육군의 주관으로 적정 항재밍 수준 연구용역이 추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5년 7월 예정이었던 탐색 개발 계약도 체결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향후에 ROC 수정 및 비용분석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탐색개발 계약 시기와 완료 시기가 대폭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장기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ROC를 조속히 확정하고 합참·소요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탐색 개발 계약 및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1번 사업은 해병대 운용하려고 하는 K-2 전차의 적시 전력화를 위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해병대 노후 K1A2 전차를 K-2 전차로 대체하는 동 사업은 4000억 원 이상의 증액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26년도 정부예산안 3539억 원의 해병대 운용 K-2 전차 양산 소요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비용분석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예처와의 총사업비 수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회의 예산 증액 취지와 해병대의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총사업비 분석·수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산계획 수정 및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가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12번 사업은 120mm 자주박격포의 탄약 양산 사업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동 사업은 기계화부대 자체 화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120mm 자주박격포와 탄약을 패키지로 20년부터 25년까지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 박격포의 납품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만 탄약은 업체의 생산 및 수락시험 지연 등으로 27년까지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순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자주박격포의 실질적인 전력화를 위하여 탄약 양산 및 납품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0번 안건 155mm 정밀유도포탄은 주의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11번 안건 K-2 전차 양산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12번 안건 120mm 자주박격포 양산사업 주의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장님, 저희가 어제께 국방부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이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어떤 일을 저는 순연시킨다고 안 봐요.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업체의 품질 개선 이것은 군에서 기준을 마련하잖아요. 군에서 마련한 평가기준을 업체가 충족 못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에 책임을 묻는 건 저는 과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차장님께서도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데 답변을 충분히 하시고 과연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맞는지도 좀 고민해서 답을 주세요.

제가 오늘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K-2 전차 양산 전략 시기가 결국 기획예산처 예산 확보 못 해서 되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이 암만 요구를 해도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이 못 주면 전력화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본인들이 책임을 지려고 해요? 이거 제도개선 수용하겠다면 어떻게 제도개선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K-2 전차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해병대용 물량을 위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예처랑 협의해서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또 연말까지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늦어지는 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왜 본인들 책임으로 인정을 하세요, 그거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중에서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공무원들 관리가 잘못돼서 언론에 보도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본인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저자세로 방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평가기준 설정을 다 본인들이 책임지려고 그래요. 합참에서 하는 것을 왜 본인들이 책임을 저요?

그리고 군은 요구하는 게 항상 요구 조건이 높아요. 만약에 요구 조건이 낮은 것을 갖고 오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낮은 거 무기 획득했다고 또 그렇게 질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차장님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그 소속 직원을 대신해서 여기 와 계시는 거고 차장님 답변들을 소속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자긍심 훼손시키지 않도록……

여기에서 위원들 입맛에 맞는 걸 대답하러 여기 나오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차장님, 10번 사항 155mm 정밀유도포탄 유도 방식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이게 GPS 방식……

○강선영 위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그래서 GPS 정밀유도면 결국 GPS 교란, 즉 재밍이 일어나면 이 포탄은 유효하지 않은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정 항재밍 수준 연구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55mm 정밀유도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탐색 개발 계약도 체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타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사전에 없으셨나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사실은 항재밍 기능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그런데 이 항재밍 기능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탄의 가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항재밍 수준을 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군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좀 많이 지연이 됐지만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착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155mm 포탄이 아니고 정밀유도포탄이다라고 하면 정밀유도라는 게 사실은 이 탄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GPS 교란에 반응할 수,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이 누락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GPS 성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포탄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포탄이다.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K-2 전차는 뭐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 120mm 자주박격포, 제가 지적한 건 아니지만 25년에 박격포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면 27년에 탄이 양산될 때까지 2년간의 공백은 이 탄은 다른 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120mm 다른 탄으로?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20mm 탄이 한 5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종 정도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개 정도가 최초 양산품 검사할 때 좀 문제가 생겨서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도 27년 말까지는 전량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쓸 수 있는 교육용 탄약이라든지 실제로 쓸 수 있는 탄은 있는데……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연습탄 이런 부분은 다 납품이 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납품됐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7년에 된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아까 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의해요. 방사청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방산 쪽에 있는 업체들 방산 비리 방산 비리 해서 상당히 노력을 폈 하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 방산 비리라기보다 무기 구매하는, 무기 판매하는 또는 로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리가 주로 많았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방사청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또 우리 방위산업 4대 강국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또 위원님들이 이걸 질타하고 견제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이 다른 거는 정확히 답변을 주세요. 아까 같은 경우 ROC를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참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기술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사실 제가 합참에 근무할 때 보면 합참은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고 방사청은 ROC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충돌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시고요. 아까 장비도 15년 전의 평가와 몇 년 이런 거 딱 기간을 들으면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신껏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해 가지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물론 여기서 위원들 얘기를 수용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되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포함해라.

유영하 위원님, 우리 국방위에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유영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군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특히 방사청 많이 애정 가져 주셔서.

10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11번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2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3번, 14번 사업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기동화력 2건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 관련하여 구매 발주 방식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5년도에 기관단총과 조준경에 대한 입찰공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5년 3월 구매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분리발주를 하되 기관단총 기종 결정을 먼저 한 이후에 조준경을 순차적으로 획득하는 순차발주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준경 입찰공고에 필요한 예산이 불용·조

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3년 사업분석과 24년 사업타당성 재검증 단계에서 모두 분리발주의 타당성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순차발주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전력화 일정 등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수 장비를 연계하여 획득하는 사업은 동시·순차 발주 여부와 획득 순서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분석·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을 제시하셨습니다만 구매 발주 방식 검토라든가 제도화 측면을 봤을 때 제도 개선이 좀 더 적정해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14번 사업은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의 적시 전력화를 위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시면 동 사업은 2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대금 등으로 64억 4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습지만 영상증폭관 신뢰도시험에서 대상 업체의 성능 미충족으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3년부터 입찰공고의 순연과 대상 업체의 기준 미충족 등으로 26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고 있고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개량된 야간투시경이 추가 지연 없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비들의 야간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후속 야간투시경 도입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를 제시하셨습니다만 업체의 귀책사유가 좀 더 있다고 보아 주의 유형이 보다 적정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3번 안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은 방위사업 관리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하고 또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신뢰도 측정 기한 단축 시험 방안을 개선하였고 신규 입찰공고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차장님, 단안형 투시경 관련해서 보니까 25년 2월에 1순위 업체가 밝은 빛 분해능 기준이 미달했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2순위 업체는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총사업비가 87.6억 원인데 이 기능이 필요하다면 단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건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밝은빛 분해능 관련해서 우리가 제시한 시험기준 이걸 충족을 못 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시험을 해 보니까 충족을 못 했다는 판단이 나서 탈락이 되

있고, 그리고 2순위 업체 같은 경우는 아마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돼서 최종 유찰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뒤에 계신 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PVS-6를 쓰는 정도의 양안경을 써 봤는데 한 2300배 정도 증폭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요구한 겁니까?

○방위사업청기동사업부장 고흥석 기동사업부장 고흥석 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안형 같은 경우는 PVS-04K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PVS-07K는 과거에 한 구로 들어오고 양안으로 보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성능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밝은빛 분해능 기준이 얼마나 차이 나서…… 아주 볼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건지……

○방위사업청기동사업부장 고흥석 밝은빛 분해능이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요구되는 것은 여섯 가지, 중심 분해능, 신호 대 잡음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밝은빛 분해능까지 있었는데 그중에서 밝은빛 분해능이 통과를 못 했습니다.

밝은빛 분해능은 어떤 것이냐 하면 통상적인 밝기에서보다 약간 갑자기 밝아졌을 때 얼마큼 해상도를 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민감성이 떨어져서 안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탈락을 했고 2순위 업체에 대한 신뢰도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게 금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를 진행을 했고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시험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했고 또 신뢰도시험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좀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공고를 8월 5일 날 정상적으로 냈고 이후 진행 절차는 저희가 좀 많이 늦었는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27년도 예산은 그대로 가도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줄여야 됩니까?

○방위사업청기동사업부장 고흥석 27년 예산은 최소한의, 입찰공고 이후에 시험평가를 위한 예산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 정도?

○방위사업청기동사업부장 고흥석 예, 충분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더 많이 해서 또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지연되는 만큼의 최소금액만을 반영해 달라는 게 제 요구 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27년 예산안에 1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리하겠습니다.

13번 제도개선 수용, 14번 사업은 주의 수용입니다.

15·16·17·18번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항공기 분야 사업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8번까지입니다.

먼저 15번 사업입니다.

소형무장헬기 사업 관련하여 패키지 시설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

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를 대체하는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현재 2차 양산까지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동된 패키지 시설 사업은 22년부터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5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관 협의, 부지 매입 이런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25년도 예산 550억 원 중에서 223억 원 정도만 집행하여 사업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패키지 시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일정도 순연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2차 양산기간 중 소형무장헬기 배치 시까지는 패키지 시설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주장비 배치 이전에 패키지 시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일정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16번 사항, KF-21 최초 및 후속 양산의 적정 총사업비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 최초양산(40대) 총사업비는 당초 7조 9281억 원에서 8조 8065억 원으로 87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후속양산(80대) 관련된 비용도 24년 추산 14조 2440억 원에서 26년 검증 결과를 보시면 18조 4422억 원으로 4조 19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KF-21 양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초 양산 이후 후속양산을 27년부터 32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후속양산에 필요한 패키지 시설의 설계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KF-21 최초양산 및 후속양산 사업에 관련된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적정한 재정 투입을 통해 각 군의 균형된 전력 획득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개발·최초양산·후속양산이 연속되는 대형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후속 단계 착수에 필요한 시설 설계나 부지 확보 등 최소한의 선행 행위를 앞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7번 사항, 특수항공작전 능력 적시 보강을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주장비 국외 구매를 위한 공모가 1개사의 단독입찰에 따라 두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순연되었고 25년도 역시 구매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전액이 집행되지 못 하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는 방위사업청은 육군 특전사의 특수항공작전 능력과 공군의 탐색구조 작전능력 보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

은 주의입니다.

20페이지 18번 사항입니다.

지휘헬기-Ⅱ 사업의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사항은, 동 사업은 25년 7~10월 입찰공고 결과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되었고 동년 10~11월 재공고를 거쳐 현재 협상·구매시험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지휘헬기 전력화 시점에는 현용 VH-92 지휘헬기의 기령이 23년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시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지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용 지휘헬기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신규 지휘헬기 전력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5번, 안전 소형무장헬기 양산은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16번, 보라매 R&D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와 관련한 사업관리 철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시설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17번, 특수 작전용 대형기동헬기 관련해서는 주의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18번, 지휘헬기-Ⅱ 국외 구매 관련해서는 주의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차장님, 제가 이거 할 말 되게 많은 거 아시지요, 소형무장헬기?

지금 한화하고, 제가 엄청나게 대면보고 많이 받았는데 엔진에 문제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항공학교에 문제 있는 엔진 하나만 교체해 가지고 교육비행 계속하다가 저희 의원실의 엄청난 지적받고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다 오픈하면 위원님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엔진을 조립하면서 망치로 조립하고 수돗물로 그거 조립해 가지고 다 부식 생기고 엔진 두 개 다 교체해야 되는데 일단 교육훈련해야 된다고 한 개만 교체하고…… 사람이 한 번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기체의 문제는 제가 차치하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기존의 500MD에 있는 부분의 이것을 LAH 사이즈에 맞게 항공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LAH는 애초에 200시간 운용하고 나면 엔진 세척하게 돼 있지요, 헬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엔진을 세척하는 헬기는 예전에 제가 타던 시누크하고 이 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엔진을 200시간 하고 나면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비고 옆에 세척조가 설치돼야 됩니다. 세척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부 이것이 들

어가게 돼 있는 기지들, 507이 있는 대구비행장, 505가 있는 부천은…… 507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위로 대구비행장 이전한다고 시설 공사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업을, 대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요. 50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선원 위워님 가셨는데, 그쪽 지역 인천에서 이 505 부지를 다른 데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해야 될 패키지 사업의 시설을 공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가라는 데가 어디냐면, 부천의 기지 빼 주고 가라는 데가 영종도예요. 그런데 영종도는 아시겠지만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고밀도 항공운용 지역이기 때문에 육군헬기 들어가면 뜨지도 못 합니다, 노탐(NOTAM) 걸려서. 운용도 못 합니다, 자잘한 것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LAH가 갖고 있는 무전기 수준으로는 공항 관제실하고 연결도 안 되지만 비행장에는 컨트롤러가 어프로치 컨트롤이 있고요, 타워 있고요, 그다음에 런웨이 컨트롤러 따로 있고 그라운드 컨트롤러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용할 수 없어요, 육군헬기는.

지자체에서 그것 하라는데 그것을 육군에만 맡겨 두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이 가려면 시설도 돼야 되고 장비도 돼야 되고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다 육군에 맡겨 두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애초에 공군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바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장헬기의 사업 지연, 장비의 지연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전력화 시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항공기는 도태시켜요. 항공기는 도태되는데 새로운 헬기는 전력화가 안 돼요. 그 사이에 있는 전력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라매사업, 광주비행장에 지금 호남 반도체공장 들어온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유명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셨는데 거기 비행구역 5구역에 큰 타워크레인이 설치가 돼서 반도체 공사한다는데, 5구역에 대해서 보게 되면 45m 정도 밖에 높이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지금 150m짜리 타워크레인 설치된다는데 공군참모총장 이상이 없다 그러합니다.

더욱 문제는 뭐냐면 광주비행장에 있는 비행기들 다 다른 데로 가라 그런다는데 지금 KF-21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격납고라든지 활주로나든지 정비고라든지 그 비용에 투자된, 최초의 설계에 투자된 매몰비용들은 방사청에서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반도체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전력 소요가 얼마인지, 그것에 따른 국방부에서 산정할 수 없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대형작전용헬기, 이 대형작전용헬기는 아시겠지만, 비문이기는 하지만 이 대형 특수작전헬기가 결국은 특전사의 적지 중심 작전용 아납니까? 맞지 않습니까? 특전사의 적지 중심 작전은 개전 초에 H-hour가 선포되면서 적을 알기 위해서 가는 작전인데, 지금 이게 1개 업체의 단독입찰에 따라 유찰됐다 그러는데, 결국 대형헬기를 만드는 회사 전 세계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CH-47 보잉사가 됐는데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면

이 사업 안 가나요? CH-47은 도태돼서 이미 고철로 팔아 버리겠다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도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항공기는 다 도태시키고 새로운 항공기 안 들어오면 특전사는 유명무실한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특수작전용 헬기 저는 지적 안 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소형공격헬기에 대한 항공기 기체의 문제, 패키지 사업의 문제, 그다음에 광주 호남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KF-21 보라매사업에 대한 추진, 그다음에 특수작전용헬기 기존에 있는 것 도태시키면서 아직 이것 협상이 안 됐을 때 생기는 전력 공백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우선 소형무장헬기 관련해서는 엔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산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고 제작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산업체, 원 제작사, 기품원, 군 이렇게 다 해서 지금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 9월에 검증이 되면 10월 정도에 생산 대비를 할 것이고, 현재 항공학교에 납품된 헬기도 9월에 검증이 끝나면 12월 정도에는 운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다 교체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곳에, 25개소 정도에 패키지 시설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관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방위사업청도 군과 지자체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광주공항 이전에 따른 보라매 사업 시설의 영향성 이런 부분은 공군으로부터 전달받은 바는 없는데, 같이 협의해서 영향이 있으면 같이 개선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관련해서는 지금 해외 제작사의 제안가가 저희들 총사업비를 많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사업비를 좀 기획처랑 조정하든가 아니면 어떤 헬기의 전체적인 공급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일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같이 좀 병행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무기체계획득비가 사십몇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서?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위력개선비……

○강선영 위원 예, 방위력개선비.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26년 기준 20조 정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20조?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그중에서 지금 누적돼서 써서 그렇지 공군이 지금 보라매 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그렇게 투입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공군은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냅니다, 공중급유기 이렇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나면 사업의 단위가 크고 굉장히 상징적이라서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물 먹는 하마처럼 공군이 큰 사업으로 다 썩썩 빨아 가면 육군의 자잘자잘하지만 중요한 사업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보라매 사업은 F-4, F-5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면 그 사업비 어디서 나오니까? 방위력개선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들 다 축소돼야 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보라매 사업 같은 경우 축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군의 작은 데긴요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 자꾸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핵추진잠수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해군은 ‘UAV 이륙하는 상륙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요도와 긴급도와 그다음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가야지, 지금 무전기토 2.5세대 것…… 해안초소 가면 무전기 그런 것 쓰고 있는데 해군·공군들이 전력화에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방사청에서 좀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합동전력 발휘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각군 균형전력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사업 정리하겠습니다.

15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16번 사업은 하나는 주의, 하나는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17번 사업은 주의 수용이고요, 18번 사업은 주의 수용입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2시 반 경에는 의결정족수 5명을 딱 채워야 돼서 1시 40분까지 속개할 테니까 오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9번부터 22번, 주로 함정 사업이네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함정 사업 분야는 총 4건입니다. 19번부터 22번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번 사항입니다.

한국형구축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상세설계 단계에서 경쟁업체 고발 등으로 사업 추진 방안 결정이 지연되어 순차적으로 선도함 인도 일정 역시 당초 29년에서 32년으로 늦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 25년 예산액 497억 3500만 원 중에서 4억 61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더욱이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예산액 498억 원 중에 99% 수준인 493억 정도만이 타 함정 사업으로 전용되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보시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관련 사전준비를 면밀히 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및 대규모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방위력개선사업 간 이·전용에 대한 사업별 자금관리 원칙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전용에 대한 별도의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전용으로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국방중기재정계획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적으로 환류하도록 제도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2페이지, 20번 항입니다.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의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전 지원함 사업은 21년 전력화 예정이었습시다만 22년 소요 수정 발생으로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특수전 지원함의 자선(子船)으로 연계가 필요한 특수침투정 사업 역시 23년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25년 12월에 사업 추진 방법 역시 국내 연구개발에서 국외 구매로 변경되는 등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해상침투 지원함정의 도태 이후 2년 이상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해상침투 지원함정이 도태되기 전에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모두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1번 사항은 잠수함구조함-Ⅱ 사업의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의 종료연도인 25년에 예산현액 890억 3700만 원 중에서 99% 수준인 880억 2600만 원을 사업 종료연도를 초과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24년 11월 함정 인도 이후 정산·지출에 이르는 후속 집행절차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향후 유사 사업 시 함정 인도 이후 원가정산 등 후속 절차 지연으로 사업 종료연도 내에 집행이 완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4페이지, 22번 사항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 사업 중에 패키지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 사업의 주장비는 25년 12월 1차 인도되었습니다라는 패키지시설 완공이 당초 24년에서 27년으로 지연되어 전력화 시기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25년도 예산현액 530억 중에 약 212억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의 금액은 연말 지출결의 후 국고당국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패키지시설 공사가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시설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품대금의 연도 말 집증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잔여기간 중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

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19번 안전 한국형구축함 사업은 첫 번째, 추가적 지연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전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이·전용 발생 시 차기 중기계획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환류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20번, 특수전 지원함 Batch- I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주의 의견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21번, 잠수함구조함-II와 관련해서는 주의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22번,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시정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원 위원 이미 시정요구사항에 각 위원님들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9번 사업은 첫 번째 과제는 주의, 두 번째 과제는 제도개선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20번 과제는 주의 수용, 21번 과제는 주의 수용, 22번 과제는 시정 수용입니다.

그러면 23번, 24번, 25번 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발표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유도무기 사업은 총 3건입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23번 사항입니다.

자항기뢰 주장비의 저장시설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자항기뢰 주장비와 정비시설은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장시설은 24년에 천장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준공 시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화 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아울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감리비 1억 500만 원을 전용·조정 등을 통해 집행하려 했습니다만 사업지연 및 국고당국 사정으로 5300만 원이 다시 이월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자항기뢰의 임시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저장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감리비 등 소요가 확인된 비목은 전용·조정이 아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4번 사항 철매-II 성능개량 2차 사업 관련하여 총사업비 조정 및 예산편성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패키지 시설공사는 24년 설계 단계에서 예상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를 초과함에 따라 2개소에 대한 재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중 1개소에서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현재 총사업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편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시설공사의 입찰이나 계약이 불가함에도 해당 연도의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 절차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에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강화하고 유도탄저장고 공사가 추가 지연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만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주의가 좀 더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5번 사항 장거리함대공유도탄 FMS 구매 사업의 지연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미국이 개발·운용 중인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5년도 예산액 5억 1600만 원 중 16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계획대로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전력화 지연을 우려하여 25년에 국내개발을 검토하였습시다만 국내개발 불가 결론으로 FMS 방식으로 다시 사업 재추진하는 등 획득방식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올해 6월 FMS 계약이 체결되어 34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FMS 방식의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추진 저해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약 일정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23번 안전 자항기뢰와 관련해서는 주의 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24번,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양산과 관련해서는 현 지침에 이미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23번 주의 수용, 24번 주의 수용, 25번 시정 수용입니다. 이미 해당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한 검토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도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26·27·28 과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정책·행정지원 및 세입 분야는 총 7건입니다. 우선 내용이 많기 때문에 26번부터 28번까지 3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6번입니다.

연구개발 사업 중의 지적사항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력개선사업의 15개 세부사업 중에서 10개 세부사업에 전문계약직 인건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집행률이 60% 미만이라는 지적입니다. 세부데이터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연구원 채용지연 등 부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문계약직의 채용조건에 대한 연구원의 불만족 등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전문계약직 미충원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및 과제 수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제별 정원, 전문계약직의 처우수준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2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7번 사항입니다. 바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2월 말 국고계좌의 일시적인 잔액 부족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약 8036억 원의 지출 필요 자금이 회계연도 내 지급되지 못하는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국방부는 5002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국방 분야 1조 3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미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5회계연도에 지출결의하였으나 불용처리한 사업의 이월충당을 위하여 26년 1월부터 전용 및 내역변경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년도 예산 연초부터 국회가 확정된 당초 편성 내용과 다르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운용 또는 다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5회계연도 방위력개선비 미지급 사태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미지급액 충당을 위한 26년도 예산의 전용·내역변경 등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 및 자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8번입니다.

방산수출 관련된 부분입니다.

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출자규모 및 펀드 조성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전제로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운용사의 모집공고가 25년 8월로 늦어지는 등 사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방산수출 성장세 지속 및 방산생태계 저변 확대라는 펀드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후속 자펀드 결성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성된 자금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26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개선 사항 수용하겠습니다.

27번, 방위력개선비 미지급과 관련한 안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28번, 방산수출 투자지원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볼게요.

25번의 전문계약직이 보통 계약기간이 처음에 몇 년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계약기간이 처음에 2년을 계약하고 또 1년을 평가하고 그 평가가 끝나면 괜찮으면 사업기간 전체를 해서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 보수체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보수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통령 연봉보다 많이 받는 공무원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대통령보다 연봉이 훨씬 많은 부분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 민간 기업체는 회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따라가느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수인력을 확보할 때는 그들한테 유인책이 있어야 돼요. 첫째, 계약직이라고 제가 여쭙봤잖아요. 이분들이 계약직에서 2 플러스 1을 하고 그다음에 10년 한다고 그러지만 그다음에 10년 뒤에는 자기의 장래가 보장이 안 돼요. 그렇다고 공무원 보수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간섭은 엄청나게 많을 거고, 거기 누가 오겠어요. 저라도 우리 애들 안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할 때는 공무원의 직위체계랑 상관없는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10억도 줘도 된다고요. 연봉 10억을 받아서 그 사람이 무기체계를 개발해서 몇백 억, 몇천 억을 세이브시키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무원 마인드를 좀 버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런 우수인력들은요 정규직으로 확보해서 테뉴어처럼 아예 정년이 없는 정도로 확보를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무기 개발을 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른 나라에 뺏기면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적국에서 또는 우리와 비우호적인 데서 이 사람한테 지금 연봉 체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연봉을 제시하고 주거 조건 제시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 제시해서 오라고 그러면 안 가겠어요? 간단 말이에요. 우리 삼성전자에서 박사학위 한 연구원들의 초봉이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엔비디아 애네들 얼마 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면 우리 인력이 다 손실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방위사업청에서 정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싶으면 보수체계를 뜯어고치세요. 이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갖고 보수체계를 특수하게 만들어서 이들한테는 일반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 안 돼도 되고 정년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방위사업청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책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마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차장님, 모든 위원들이 유영하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직이 운영될 때는 똑똑한 머리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는 좀 부족하거나 공부는 부족해도 손발로 충성하는 사람도 조직에 필요한데 이 연구개발하는 사람들 연봉 높여 주시면 결국 그것이 무기체계의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무기체계의 획득비의 증가는 결국 우리 국방비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7%, 2.8%인데 저는 유명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수할 만큼의 수준이지, 말씀하시는 게 그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마치……

지금 저희가 뭐 들여다보고 있냐면 ADD라든지 일부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하면 포상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강선영 위원 연구개발해서 포상을 받는데 이게 과거와 달리 연구해서 사업이 커지고 K-방산 때문에 그것이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늘어나서 그 돈을 지금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 나눠주고 있는 상황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처음에 210대로 계산돼 있는 공격형 기동헬기가 획득비가 추가되면서 174대로 감소됐고 모든 사업이, CH-47 성능개량 10년 동안 끝다가 사업비 증가해서 안 된 것도 아실 거고요. UH-60 성능개량이 사업비 증가돼서 안 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백이 생긴 무기체계는 결국은 도입단가의 상승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유명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연구개발에 질적으로 우수하고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을 뽑아라라는 취지는 인정하는데 전반적으로 그게 사업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전문계약직을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소위원장 김병주 추가로 뭐 할 거 있어요? 두 분 말을 다 수용을 해서 해 주길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26·27·28 정리하겠습니다. 26번 시정 수용, 27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28번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32번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마지막 사항입니다.

정책·행정지원에 대해 계속해서 29번부터 32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9번 사항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국고 손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지적사항을 보시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 동안 총 305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패소에 따라 5년간 약 2442억 원이 패소 금액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패소한 사건의 원인 분석을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30번 사항, 방사청 청사신축사업 적기 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방사청 청사신축사업은 3년 연속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동 사업의 누적 집행액은 338억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13.8%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추가 지연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28년 준공 목표 달성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설계보상비를 기본조사설계비에 편성하지 않고 2년 연속 연말에 공사비에 세목 조정하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8년 준공을 위하여 대금 지급 일정 관리 및 지연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이월 반복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업 예산편성 시에 설계보상비를 반드시 기본조사설계비로 직접 계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료 사용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를 법령상 지급대상이 아닌 재직 중인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기술료의 40% 이상을 연구개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기술료 수익이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에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법령,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내용을 포함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2번, 위약금 부과·징수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 위약금은 수납액을 상회하는 과오납 반환으로 순수납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25회계연도 과오납 반환금액은 989억 7700만 원으로 부과한 지체상금 소송에서 업체 귀책사유 등으로 대폭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부과 단계의 귀책사유 판단 및 계약 해석이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진행 중인 위약금 소송 등에서 법적 타당성을 적극 분석·대응하여 미수납 채권을 회수하고 과오납 반환 사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방산업체의 귀책사유 판단 및 계약 해석에 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29번, 기타행정지원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30번, 청사신축 시정요구 수용하겠습니다.

31번,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관련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32번, 위약금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장님, 제가 법조인이라서 두 가지만 좀 짚어 드릴게요. 29번에 소송 패소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방위사업청에도 법무실이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보통 소송을 우리가 제기를 했다가 소송을 당해서 1심에 졌을 때 또 담당자들의 귀책사유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항소, 상고를 진행을 해요. 소송에 지게 되면 지연손해배상금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얼마나 지연손해배상금이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차제에는 한번 그런 것을 1심 패소했을 때 좀 외부 로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외부 로펌에 대한 자문료가 책정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그래서 남소를 방지하는 게 오히려 지연손해금 주는 것 보다 적을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위약금 문제도 똑같아요. 위약금도 이게 보면 공무원, 물론 방위사업청에서 법무실도 있어서 검토를 해서 이걸 위약금을 내도 되겠다 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패소가 되냐면 아까 업체 귀책사유가 불인정돼서 이런 사유로 만약에 지게 되면요 사전에 저는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위사업청의 법무실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조인 전문가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검토를 하시면, 위약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받아 왔다가 지면 위약금만 주는 게 아니고 위약금에다 이자 붙여서 주잖아요. 그 이자는 순수하게 세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그냥 저는 외부 로펌을 공무원들이 자문받는 것을 되게 꺼려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 로펌 자문료 아주 비싸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막을…… 변호사 비용은요 시작하면 비싸지만 시작하기 전에 하면 되게 싸입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국고도 손실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방위사업청 내부에 법무실이 있고 정부 법무공단이나 외부 로펌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큰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柳榮夏 위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정부 위원회 있을 때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에 반납하는 게 한 1800억 정도 돼요. 지연 이자가 굉장히, 한 팔십몇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팔십몇억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거를 수 있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미리 거를 것은 거르고 남소, 굳이 상고·항소를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냥 1심에서 끝내는 게 지연손해도 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따가 2시 반에는…… 유영하 위원님 몇 시에 가야지요?

○柳榮夏 위원 40분까지 가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40분? 그래서 정족수 때문에 그 시간 맞추지 못하면 또 내일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깐 조금 의견을 간략하게, 짧고 치열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황명선 위원 강선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소송 패소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5년간 로펌 고용 건수가 많은데 그다음에 41억이나 썼는데도 지금 승소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24년 이후에 승소가 2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시작부터 구조상 패소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유명하 위원님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걸 소송까지 안 끌고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 소송이 패소해서 5년간 2442억 원이 패소됐다는 것은 안 써도 될 돈이었을 수도 있다, 반 정도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아까 좀 전에 미리 말씀드린 31번,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31번입니다. 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11조에 보면 기술료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참여한 인원에게 대한 보상을 줄 수 있으나 여기 보면 기술료 40% 이상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돼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크든 작든 고생하고 연구성과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ADD 기술료 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해 주고요. 결산서에 관련 내용을 좀 포함시키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술개발보호국 기술정책과 한 명이 이것 다 담당하는데 앞으로 K-방산 수출이 활성화되면 기술료 계속 증가할 텐데 이것 다 ADD 인원들의 보상비로 나가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국고에서 투자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재투자도 필요한 것 같고 국가에서도 투자했으니까 연구개발한 것 아닙니까? 차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지금 제도개선 중에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저도 유명하 위원님하고 강선영 위원님하고 결이 같은 내용입니다. 2442억 패소 금액 이것 참 국민의 혈세인데 참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향후 5년간의 내용인데요. 이게 매년 국정감사나 또 우리가 예산결산소위 결산할 때 보면 꼭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제도개선으로 그냥 이렇게 조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장님, 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유명하 위원님께서도 주신 말씀에 보완해서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실천적, 현실적 방안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심에서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소송이 붙게 되면 결국 기본적으로 2심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국회 차원에서 저희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건수로 보면 305건인데요.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결국은 방사청에 납품

하는 업체들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본인들의 분쟁에 의해서 방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내용과 현황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제도개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차장님, 제가 31번 기술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는데 아까부터 자꾸 아마 착오가 있는지 제도개선 말씀하시는데요. 31번은 시정인데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할지 회수할지 이에 대한 부분도 따로 저희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리하겠습니다.

29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 30번 사업은 시정 수용, 31번 사업은 시정 수용, 32번 사업은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업 3번에 대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 강선영 위원과 천하람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시정요구사항은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주의 수용을 했는데 오전에 강선영 위원님은 강도를 높여서 이것을 정책감사를 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차장님이 세부적으로 강선영 위원께 보고드리고 다시 오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안 계셨던 분을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TICN 아까 사업은 2010년도경에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15년 후에 다시 하다 보니까 1조 2005억에서 이렇게 2조 얼마까지 해서 배 정도 올라가는 사업이 돼서 제대로 반박에 안 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께서 강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차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황명선 위원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지금 TMMR 관련해서는 현재 총사업비가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돼 있는데 KIDA 비용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2조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서 총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 양산목표 단가를 추정할 때 그 당시에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증가가 되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1조 2000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1조 2000억의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된 사업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상정해서 사업타당성조사, 국회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사실 TICN 이것은 제가 군에 있을 때 했던, 보급이 돼서 했던 건데 사실 이거 연구개발하는 데도 수년이 걸려서 TICN 연구개발할 때는 이렇게 통신이 되면 엄청나게 첨단화되겠다 했는데 2010년도경인가 그때 보급되면서 봤을 때 벌써 낙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과학통신 분야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영출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15년 전에 책정했던 거와 배가 올랐다는 것 아니에

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15년 동안 물가가 2010년도는 이명박정부 때 제가 기억에 했던 것이고 이것 다시 책정하려고 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맞습니다. 최근 25년도에 저희들이 비용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2조 이상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15년 동안 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지요, 2010년도하고 2025년 하면?

제가 그냥 구두로 판단했을 때 매년 3% 이상 올랐을 텐데 3%만 해도 삼사십 퍼센트고 일부는 2배, 3배 100%, 200% 오른 분야도 많지요. 음식은 제가 2010년도는 김밥 한 줄 1000원에 먹었는데 지금은 4000원, 5000원 할 정도로 일부 물가는 400배, 500배 많이 올랐던 상황인데……

이것을 최초 요구했던 주의에서 정책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제가 이걸 정책감사를 요구한 데는 이와 유사한 사례, 어제 국방부 끝나고 나서 국방부 감사관과 차관이 그 전년도, 25년도 9월 5일 날 국회예결특위에서 주요 기관 교육용탄약 사업 예산이 3억에서 204억 원으로 증가된 예산안이 과도하게 이·전용된 데에 대한 자체 정책감사를 하라고 하고 25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제 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 많이 빠지고 위원님들 계실 때 보고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황명선 위원님께서 3억이 204억으로 된 과도한 이·전용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하고 여기서 종결시키는 건 맞지 않다, 그것은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선 다시 논의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관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200억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방예산 전체로 보면 저희가 한 20여 조 쓰기 때문에, 예산액 200억은 우리가 평생 만져 볼 수 없는 금액이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건 아마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지만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정책감사를 시키고 감사원 감사를 시키고 수사를 시키면 결국 이걸 사업한 공무원들이나 거기 있는 현역들이 다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황명선 위원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 이 TMMR 사업이 2016년도 1.2조 원에서 2025년도 2.2조 원, 애초에 1조 2000억 원인데 2조 2000억 원, 그러니까 1조나 증가한 사업도 우리가 그만큼 정확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고 감독을 하는데 200억 증가했다고 감사관이 왔는데 여기 안 계시지만 저는 감사관의 태도도 말이 안 되는 게 국방부라는 데는 행정부서고 국회는 입법부서입니다. 행정부의 국정 에 대한 감시·감독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시키는 건 우리의 요구사항이지만 그 감사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건 각 행정부서인데 그거를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면 행정부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독립적인 감사 권한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예결특위의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

도 아니고, 예결특위 지적사항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이 획득사업의 주체가,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에서라고 했으면…… 감사관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만큼 정책감사를 했으면 처분도 너네들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경고를 심하게 주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거를 또 감사원 감사시키고 수사시키면 방사청의 그다음에 각 육해공군 본부의 이 전력사업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ROC 솔직히 잘 안 바꿉니다, ROC 바꾸면 고소·고발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이미 어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의결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충분히 야당 간사하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에 간 무인 정찰드론도 아니고 소형 자폭드론 획득은 됐으나 사용되지도 않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거를 처리할 대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급하게 처리된 것 같은데, 제가 이 TMMR 봉니를 부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20조씩 운영하는 데 다년도 사업으로 1조가 2조가 될 수 있는 것이 국방위의 사업 무기체계 획득이다. 그래서 황명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논의가 된 그 사업,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200억인데 주의와 경고를 주고 여기서 보고받고 끝내야지 그거를 왜 더 높은 전체회의에 올리고 논의가 되고 시끄럽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제가 어제께 사회를 봤기 때문에 먼저 교통정리를 하고 발언……

어제 거와 오늘 거는 일단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제께는 그 전에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방부에 감사하라고 했고, 했던 이유는 200억 정도 전투물자를 전투지원체제로 바꾸어서 급조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법을 위배했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 4명의 의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거는 여야 2명, 2명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임종득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종배 의원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당에는 최기상 의원하고 또 누구 한 분이, 부승찬 의원인지 문제를 제기해서 국방부에서 충실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끝났으니까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당·야당 간사와 국방위 위원장한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2명과 위원장까지만 보고를 받고 끝내기는 뭐하니 제가 지난주 문제 제기해서 최소한 예결소위에는 보고를 해서, 보고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조치를,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알아서 감사하고 보고를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 사안이 혹시 내란과 연계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감사의 미흡한 점을 어제 황명선 위원님이 지적하면서 이것은 예결소위에서 끝낼 수 없으니 전체회의에, 보고지요. 감사원 감사를 한다, 고발한다 이걸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나중의 문제고 그건 차원이 다른 거고요. 예결소위에서 보고받고 끝내기엔 부담스러우니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자라고 제의한 거고 그것이 어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께 얘기했던 거는 이것은 하려면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유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저는 그걸 수용해서 여야 간사와 위원장

님이 합의해서 전체회의 보고를 언제 할지 이런 걸 잡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까지가 의결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것을 연계하는 거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그 사업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 요구한 겁니다, 200억 가까운 거를 유용했든 아니면 전환을 빨리 해서 신속 획득하기 위해서. 물론 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신속 획득체계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했으리라고 저는 추정엔 하지만 그래도 이걸 보고의 문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법으로는 위배됐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작년에 감사를 요구했던 겁니다. 국방위가 아니라 예결위 가서 그것이 확인돼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고 감사원 감사나 또는 고발 조치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특정 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보고와 조치와는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어제 보고받으신 분들이 고발 조치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만한 그걸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지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제의하면, 이거 갖고 토의하다 보면 괜히 정책적으로 감정 싸움이 될 수가 있으니 제가 봤을 때 이런 감사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사실 방사청 감사하면 또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여기서 위법성에 관련되는 것들이 확인이, 의혹이 있으면 그러는데 위법한 것보다는 저는 이거는 15년 동안의 물가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 못한, 예측의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최초로 강선영 위원님도 주의를 시정요구했고 이걸 방사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되 부대의견으로 강선영 위원님이 정책감사를 요구했다는 걸 넣고 오늘은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의결하는 절차가 있으니 그때 강선영 위원님께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각자 의견을 듣고 이거는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부대의견이 아니라 명시의견으로 하면 더 확실하니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예.

○**소위원장 김병주** 명시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의견 어떤가요?

○**박선원 위원** 아까 저도 별도로 보고받았는데요. 다년도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방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정책감사 하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황명선 위원님은요?

○**황명선 위원** 저도 박선원 위원님하고 동의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유명하 위원님은요?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의결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감사를 황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하고 국방위원장께 상의해서 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오늘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렇습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지만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떤 상임위든 어떤 대정부질의를든 어떤 테서도 저는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나 상대방에 대해서 각당한 예의를 지켰었어요.

위원장님 오늘 말씀 중에 또 내란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흔히 저희를 보고 내란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내란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해산이 돼야 되고요.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황명선 위원님을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동료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토를 안 달았던 건데 저는 그냥 어저께 의결이 됐으니까 의결된 걸로 가고 이거는 또 정책감사는 부대의견 달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그 문제는 저는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숙고를 하셔서 갖고 국방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와 숙의해서, 이걸 꼭 전체회의에 올려야 되느냐?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군도 그렇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상처는 헤집으면 헤집을수록 더 깊어지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내란의 우두머리 처벌받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명하복 관계에서 명령을 따랐다 해서 때에 따라서는 무혐의 받은 사람도 예편이 되고 삼십몇 년간 군의 명예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 지금도 아직도 영어의 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실무자를 헤집어서 들쭉시면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유명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어저께 그 문제는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유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실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거는 공이 저한테 온 거고요. 그래서 여야하고 위원장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걸 어떻게 할지, 일단 국방부는 예결소위에 보고를 했으니까 사실은 중간은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테니까, 제가 봤을 때……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말씀하세요.

○강선영 위원 분명히 김신숙 감사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이 소형 자폭드론이 평양에 갔던 그 드론이냐’라고 질의하셨지요? 황명선 위원님인지 위원장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위원장 김병주 내가 기억하지요.

○강선영 위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거는 경찰 드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 자폭드론 갖고 또 내란을 말씀하시면…… 저는 뭐냐 하면 일단 계엄이 일어날지도 몰랐지만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벌받을 사람 다 처벌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 아니더라도 아까 유명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무기 체계가 다 그러면, 작년에 획득한 모든 무기 체계는 계엄에 기여하려고, 저희가 계엄에 써먹으려고 다 획득한 겁니까?

이거 자폭드론 말씀들 하셨잖아요. 제작년에 김병주 위원님 오물풍선에 대해서 대응 안 한다고 맨날 방송에 나가셔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폭드론 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해하면 이거 써먹지도 않았고 전력화만 됐다면, 저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드론 획득한 사람이 누군지, 운용한 사람이 누군지, 운용할 부대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제 김신숙 감사관이 그랬잖아요, ‘정찰드론에 대한 감사는 진행 중입니다’. 정말 궁금하고 아시고 싶으면, 평양에 왜 드론 보냈는지 아시고 싶으면 평상시에 원래 그계 상호 간에 적성국 간의 행위가 일어나는 정찰감시 활동이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것 정말 그계 내란에 소요되는 자산이라고 필요하시면 정찰드론 결과 감사보고 받으시고 이 건 넘겨 주세요. 여기 획득되어 있는 사람들……

○황명선 위원 지금 뭐예요? 무슨 말씀…… 오늘 빨리 방사청 의결하자고요.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 황 위원님.

잠깐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은 어제 국방부, 병무청 이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회의할 때 일어났던 거를 그대로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이런 것들을 보고받았다, 소위에서. 그런데 위원 중의 한 분이 전체회의에 이를 하기로 제의해서 이것은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넣었고요. 오늘 거는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수용으로 하되 이름을 명시하기를 원하면 강선영……

○강선영 위원 상관없습니다, 명시하셔도.

○소위원장 김병주 주의 수용으로 하고, 강선영 위원께서 정책감사를 했다 하고 명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이것이 되니까.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이름을 굳이 병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한 위원이, 아니면 거기에서 위원 중 한 분이 얘기했다 이렇게 이름 빼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두 분 다 빼고 그걸 그대로 전체회의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회의에 공을 넘겨서 원만하게 이것이 또 결정되도록……

그러면 3번 과제는 주의 수용으로 하고 부대의견에다 명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사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

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차장님 인사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김일동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 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선영 김병주 박선원 유영하 천하람 황명선

○출장 위원(1인)

성일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김인환

병역자원국장 정재숙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서승일

방위사업청

청장직무대리 김일동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정호

방위사업정책국장 정범승

방위산업진흥국장 이형석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기동사업부장 고흥석

화력사업부장 이승호
함정사업부장 최상덕
우주사업부장 김동춘
유도무기사업부장 이종주
첨단기술사업단장 박근영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임시회의록